

연구논문

# 일본제국의 식민지 개발 구상과 척식 네트워크의 구축

남부 사할린 개발과 樺太開發(株), 1931~1945

---

조정우

경남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사회사 전공

chojwoo75@kyungnam.ac.kr

---

- I. 문제 제기: 또 하나의 식민지, 남부 사할린
  - II. 러시아와 일본의 교착지대, 사할린-카라후토
  - III. '이주형 식민지'의 산업화
  - IV. 카라후토 개발계획의 등장과 척식회사의 설립
  - V. 나오며: 척식 네트워크와 군사주의
-

## I. 문제 제기: 또 하나의 식민지, 남부 사할린

---

일본제국의 식민지로는 흔히 조선과 대만을 든다. 그리고 법적으로는 독립국의 형식을 취했지만 만주국도 사실상의 식민지로 간주된다. 조선·대만·만주 이 세 지역에 대해서는 한국·대만·중국에서는 물론이고 일본에서의 식민지 연구에서도 많은 연구가 축적되어 가고 있다. 그런데 일본제국의 식민지는 그에 그치지 않았다. 요동반도의 관동주를 비롯해 남태평양의 남양군도(미크로네시아)도 있었고, 또 이 글에서 다룬 남부 사할린도 일본제국의 영토였다.

일본이 1905년 러일전쟁의 승전으로 권리를 획득한 관동주는 1932년 만주국이 건국되면서 조차지로서의 법적 지위가 모호해졌는데, 그런 탓에 관동주는 독자적인 연구 단위로서라기보다는 일본제국의 만주 지배라는 큰 범주 속에서 다뤄져 왔다. 남양군도와 남부 사할린은 조선·대만·만주에 비해 상대적으로 연구 성과가 적은데, 이는 두 지역에서 ‘선주민(先住民)’ 자체의 인구가 적었던 탓에, 독립 후 탈식민화를 추구할 민족집단·에스닉집단의 규모가 너무 작다는 데 일차적인 원인이 있지 않을까 한다. 다시 말해, 식민지배의 역사적 경험에 끼친 영향을 재검토하고 이를 극복할 방안을 모색할 대증적인 열정도, 또 이 열정을 이끌 민족 엘리트 집단도 충분하지 않았던 것이다. 오히려 남양군도와 남부 사할린의 식민지배에 대해서는 ‘본국’이었던 일본 학계가 공백을 메우고 있는 형편이다.

그런데 남양군도와 남부 사할린은 한국의 역사와 결코 무연(無緣)한 곳이 아니다. 일본제국의 남북방 한계로서, 조선과는 지리적으로 멀고, 또 그런 탓

---

\* 이 논문은 2020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인문사회분야 신진연구자지원사업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20S1A5A8043795).

에 한국인의 심상지리 바깥에 있지만, 이 두 지역에는 바로 ‘조선인’들이 살고 있었다. 특히 1937년 중일전쟁 발발 이후 일본이 전시체제로 들어가면서 남양군도와 사할린에까지도 조선인들이 전쟁에 동원되었다는 점에서, 이 두 지역은 한국 근현대사의 일부라고 해야 할 것이다.

지금까지 한국 학계에서 남부 사할린에 대한 연구관심이 조선인 강제동원과 그 식민지적 유산인 ‘사할린 동포’의 디아스포라 문제에 집중된 것은 이 때문이다. 노태우 정부의 북방정책, 1988년 서울올림픽, 그리고 1990년 한 소수교로 이어진 일련의 과정을 통해 1945년 8월 이후 거의 단절되어 있던 사할린 동포들의 존재가 알려지기 시작했고, 마침내 민족적 조우에 이르게 되었다는 점은 새삼 반복할 필요가 없을 터이다. 한국에서 사할린 동포의 역사는 일체에 의해 탄광으로 강제징용되었다가, 일본이 패전하면서 그대로 방치해 두었고, 또 남부 사할린이 공산주의 국가 소련의 영토로 재편입되면서 고국에 돌아오지 못하고 소련 국적의 ‘고려인’이 되었다는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 이 디아스포라의 서사에서 결코 틀린 것은 없지만, 사할린의 역사를 한국의 민족적인 시각으로만 바라보고 있는 게 아닐까 한다. 다시 말해, 조선인 강제동원 이전의 사할린사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며, 또 그 이해 위에서 사할린 동포 문제를 검토해야 해야 할 것으로 본다.

사할린 고려인의 민족 정체성 문제에 있어 한국 학계에서 별다른 검토없이 논의되고 있는 지점 중 하나가, 사할린 고려인과 중앙아시아 고려인은 서로 다른 역사적 경험을 갖고 있다는 인식이다. 사할린의 고려인들은 대부분 1938년 일본이 전시 총동원체제로 돌입하면서 조선에서 강제동원되어 사할린으로 간 조선인들인 반면, 중앙아시아의 고려인들은 그 직전인 1937년에 소련 정부가 연해주로부터 중앙아시아로 강제이주시켰기 때문에, 두 집단은 서로 만난 적이 없는 별개의 고려인이라는 것이다. 즉 사할린과 중앙아시아의 고려인은 이주의 시기와 정착지, 그리고 과정까지도 다르다고 보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인식은 사할린 동포 사회가 소련 국민으로서 경험했던 역사와 또 한소수교 이후 한국과의 만남이 낳은 현재의 상황 등이 복합적으로 겹쳐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어 소련의 남부 사할린 점수 과정에서 벌어진 연해주 출신 중앙아시아 고려인들과 사할린 잔류 고려인들 간의 갈등, 또 자신들을 일제 강제동원의 피해자로 규정하고 국가 차원의 지원 사업을 벌이고 있는 한국에 대한 사할린 고려인들의 선호 등,<sup>1</sup> 즉 사할린 동포를 둘러싼 역사와 현재는 디아스포라와 귀환의 문제만으로 국한해서 보서는, 그 전체적인 과정의 많은 부분이 누락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단적인 예로, 1938년 이후의 강제동원에 초점을 맞춘다면 전시 총동원체제 이전의 사할린에는 조선인의 역사는 없었다고 봐야 할 것인가 하는 점이다. 미리 답하지만, 사할린 조선인의 역사는 그보다 더 길다.

사할린의 근현대사는 ‘조선인’이라는 사람의 관계로도 한국 근현대사와 밀접히 연관되어 있지만, ‘자원’의 개발이라는 측면에서도 그 연관성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한국 경제사에 있어 일제 식민지 시대는 수탈과 개발이라는 상이한 역사상으로 이해되고 있다. 일본제국은 식민지 조선을 수탈했던 것일까, 아니면 개발했던 것일까? 예를 들면, 조선총독부가 1937년 제령(制令)으로 설립한 국책회사인 ‘조선임업개발주식회사’는 조선의 산림을 수탈했던 것인가, 아니면 산림을 개발했던 것인가. 조선의 나무를 베었다는 점 자체만 보서는 수탈한 것이고, 주식회사라는 근대적 기업조직을 통해 나무를 목재로서 판매했다는 점에 주목하면 개발한 셈이 된다.

---

1 중앙아시아 고려인과의 상이한 역사적 경험과 정치적 위치, 또 한국 정부의 지원·귀환 정책으로 사할린 고려인들 중 일부는 자신들을 고려인이 아니라 ‘한국인’이라 규정하기도 한다. 이 글이 사할린 조선인-고려인-한국인의 관계를 분석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하에서는 문맥에 따라 집단의 명칭을 달리할 것인데, 일제 식민지 시대를 다루는 만큼 주로 ‘조선인’이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이 글에서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 일본이 제국적 관도에서 벌인 식민지 개발의 성격과 양상이다. 방금 위에서 든 임업의 경우, 남부 사할린이야말로 식민지 임업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고 비중이 큰 지역이었다. 사할린은 아이누족을 비롯한 선주민 인구의 규모가 대단히 작았고, 또 이들은 농업이나 임업이 아니라 수렵과 채취, 어업으로 생활하고 있었기 때문에, 사할린의 산림 자원은 조선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광대한 원시림으로 보존되어 있었다. 일본의 국가와 자본이 이 사할린의 산림을 자본주의적 임업으로 개발하고자 한 것은 당연한 일이었다. 일본제국 전체의 목재 공급에 있어 조선은 사할린에 비할 바가 아니었다. 물론 정도의 차이로 성격의 상이를 규정하는 것은 오류일 것이다. 하지만 사할린과 같은 다른 식민지의 역사적 경험을 검토해 보는 것은 일제의 조선 식민지배의 성격을 다른 각도에서 생각해 보는 데 필수적인 일일 것이다. 즉, 한국의 식민지 경험은 식민지 조선이라는 지역적 층위에 더해, 일본제국이라는 보다 상위의 제국적 층위를 분석적으로 겹쳐서 봐야만 그 역사적 실태에 더 가깝게 접근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이 글에서 주목하는 지점은 1930년대 일본제국 차원에서 펼쳐진 식민지 개발체제의 등장이다. 1929년 세계대공황과 1931년 만주사변, 1932년 만주국 건국으로 이어진 일련의 과정은 일본-만주국을 중심으로 한 ‘일만(日滿) 블록경제’의 구축으로 집약되었다. 일본은 제국의 본국(‘內地’)과 만주국을 하나의 경제권으로 묶음으로서 대공황 이후 전개되고 있던 세계경제의 블록화에 대응하고자 했던 것이다. 이 무렵 다른 식민지에서도 경제블록에 동참하고자 하는 노력이 동시적으로 진행되었는데, 1930년대 들어서면서 조선총독부를 비롯한 각 식민지의 통치기구들은 잇달아 식민지 개발 계획을 입안했다. 조선총독부는 ‘日滿’의 가운데 조선의 ‘鮮’을 끼워 넣은 ‘일선만블록개발계획’을 구상하여 조선의 공업화 계획을 공표했고, 대만총독부는 ‘열대산업조사회’를, 남양청은 ‘남양군도개발조사위원회’를, 그리고 이 글에서 다룰

남부 사할린—일본에서는 카라후토[樺太]라 명명한—의 카라후토청에서는 ‘카라후토척식계획’을 세웠다.

이 동시다발적 식민지 개발 구상에서 공통적인 것은 각 식민지들이 ‘척식회사’라는 기업조직을 개발계획과 병행하여 함께 설립했다는 점이다. 1908년의 동양척식주식회사(東拓) 이후 설립되지 않았던 척식회사들이 1930년대에 다시 모습을 드러냈다. 1935년 12월의 ‘만주척식주식회사’를 필두로,<sup>2</sup> 이듬해인 1936년에는 조선에서 ‘선만척식주식회사’, 대만에서 ‘대만척식주식회사’, 그리고 남양군도에서는 ‘남양척식주식회사’가 거의 동시적으로 설립되었던 것이다. 그리고 이 글에서 다룰 ‘카라후토개발주식회사’는 설립 논의는 다른 척식회사들과 같은 시기에 진행되었지만 실제 설립은 지체되어 1941년에야 출범했다. 이처럼 대공황과 만주국 건국 와중인 1930년대 전반기에 일본제국의 식민지들에서는 식민지 개발 정책을 입안하고 그 정책의 시행사로 척식회사를 약속이나 한 듯 설립했다. 여기서는 1930년대 일본제국의 식민지 개발 구상을 ‘척식 네트워크’의 구축 과정으로 규정하고, 이 경제 개발 네트워크의 역사적 성격을 척식회사로서는 가장 늦게 출범한 카라후토개발주식회사의 설립을 통해 분석해 보고자 한다.

## II. 러시아와 일본의 교착지대, 사할린-카라후토

---

연해주의 동쪽 대안에 있는 섬인 사할린은 원래 아이누를 비롯한 비문명적 선주민이 살고 있던 아시아 대륙의 가장 외딴 지대였다. ‘사할린’이라는

---

2 일본 농민의 만주국 이민 지원을 목적으로 설립된 만주척식주식회사는 1937년에 ‘滿洲拓植公社’로 회사명과 조직을 변경했다.

지명은, 명확하지는 않지만, 흑룡강의 하류를 뜻하는 만주어에서 유래했다는 견해가 있을 정도로,<sup>3</sup> 사할린은 만주족을 중심으로 한 북방민족의 영향권 하에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사할린이 근대 국가간체제(inter-state system)에 휘말리게 된 것은 러시아가 1858년 ‘아이훈조약’과 1860년 ‘북경조약’을 통해 청으로부터 연해주를 획득하면서부터였다. 아이훈조약에서는 아무르강 북부는 러시아 영토로 편입되고 연해주는 청과 러시아가 공동관리하는 것으로 되었는데, 2년 뒤인 북경조약에서 연해주는 완전히 러시아의 영토로 편입되었다.

그 이전에 사할린 아이누는 만주족에 조공을 하고 있었는데, 청이 연해주를 잃으면서 자연스럽게 청으로부터 떨어져 나오게 되었다.<sup>4</sup> 하지만 연해주와 달리 사할린은 러시아 영토로의 편입이 명확하게 결정된 것은 아니었기 때문에 당분간 영토 주권이 모호한 채로 남게 되었다. 즉, 사할린이 청에서 분리된 것은 명백한 사실이 되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러시아가 배타적인 주권을 주장할 수 있는 것도 아닌 상황이 전개되었던 것이다. 여기서 동아시아의 또 하나의 세력이 사할린에 관여하기 시작했는데 그 국가는 바로 일본이었다.

일본이 홋카이도와 사할린 등 혼슈(本州) 너머의 북방에 대해 적극적으로 관여하게 된 것은 그리 오래되지 않았다. 쇄국정책 하에서 에도 막부는 명백히 일본의 영토로 인식되고 있는 지역의 바깥에 대해서는 매우 소극적인, 때로는 적대적인 태도로 일관했다. 하지만 서유럽 열강의 동아시아 해역 진출

3 三木理史, 『國境の植民地・樺太』(東京: 塙書房, 2006), 20쪽.

4 청조에서는 사할린섬을 아이누의 섬이라는 뜻의 ‘庫頁島’라 부르고, 길림의 三姓副都總 管할하에 두었는데, 아이훈조약에 의해 청과 사할린의 조공 관계는 단절되었다. 三木理史, 위의 책, 17쪽; 中山大將, 『亞寒帶植民地樺太の移民社會形成: 周緣的ナショナル・アイデンティティと植民地イデオロギー』(京都: 京都大學學術出版會, 2014), 9쪽.

과 러시아의 동진으로 서구 세력에 대한 일본의 긴장감은 고조되었다.<sup>5</sup> 특히 크림전쟁(1853~1856)의 와중에, 영국·프랑스 연합함대와 러시아 함대가 일본 북부의 오토츠크헤에서 해전을 벌인 일은 일본에 큰 충격을 주었다. 게다가 크림전쟁이 발발했던 1853년에 미국의 페리 제독이 에도[江戸] 앞바다에 까지 군함을 이끌고 와 막부에 개방을 압박했고, 크림전쟁이 끝난 1856년에 터진 제2차 아편전쟁에서 청은 또다시 영국에 패한 상황이었다.

에도 막부는 그간 북방에 대해 홋카이도 맨 남단의 오시마반도[渡島半島]에 마쓰마에번(松前藩)을 설치하여 선주민인 아이누족과의 교역을 독점하도록 했을 뿐 더 북쪽으로 올라가지는 않았었다. 그렇지만 서구 열강, 특히 러시아의 도래가 확실해지자 홋카이도 전역에 대한 조치를 강화했고, 결국 메이지유신 이듬해인 1869년 홋카이도를 일본 영토로 병합했다. 메이지 정부에 있어 홋카이도는 일본 본토를 방어할 완충지대였다. 만약 러시아가 침공한다면 홋카이도에서 방어를 하며, 방어에 실패하면 홋카이도를 할양하여 일본 본토를 지켜 낸다는 발상이었던 것이다. 이 본토 방어를 위한 완충지대로 식민지를 병합한다는 일본의 군사적 구상은 류큐 병합, 조선 병합, 만주국 건국 등으로 계속 이어졌다. 다시 말해 일본의 제국주의 팽창에 있어 홋카이도는 그 원형이 되었던 지역이었다고 하겠다.

이렇게 비교적 일찍 일본 영토로 병합된 홋카이도와 달리 더 북방에 있는 사할린은 일본 영토와의 관계가 보다 복잡했다. 사할린은 1855년 「리일화친조약」 이후 러시아와 일본의 공동관리 구역이 되어 있었다.<sup>6</sup> 어느 쪽의 영토도 아니었기 때문에 사할린에는 러시아인, 일본인, 그리고 아이누를 비롯한

---

5 에도 막부가 러시아의 동진 소식에 위기감을 느껴 사할린에 대해 지리조사를 하기 시작한 것은 18세기 말 무렵부터였다. 위의 책, 17쪽.

6 그리고 이 조약에서 러시아와 일본은 치시마 열도에 대해서는 홋카이도 인접 5개 섬만 일본 영토로 하고, 그 외 나머지는 러시아 영토로 하는 것으로 합의했었다.

선주민들이 뒤섞여, 일본에서 흔히 ‘잡거(雜居)’라고 부르는 상황이 펼쳐졌다. 하지만 세계 각지에서 근대적인 국경 획정이 진행되고 있던 상황에서 마냥 사할린을 공동관리·잡거 상태로 둘 수도 없는 노릇이었다. 게다가 사할린의 이권을 두고 일본인과 러시아인들 간에 마찰이 증대한 것도 국경 획정의 현실적인 이유로 작용했다. 그런데 이때 일본 정부 내에서는 사할린보다는 홋카이도가 국방상 더 중요하다는 의견(‘樺太放棄論’)이 우세하여,<sup>7</sup> 일본은 홋카이도 북동쪽으로 늘어서서 캄차카반도로 이어지는 치시마[千島, 쿠릴 열도의 영유권을 확보하는 데 더 주안점을 두었다. 결국 일본과 러시아는 1875년 ‘카라후토-치시마 교환 조약’을 체결했다. ‘상트페테르부르크 조약’으로도 불리는 이 조약에서 일본은 치시마 열도의 러시아령 섬들을 모두 일본 영토로 편입시키고, 대신 러시아는 사할린 전역을 자국 영토로 확정하는 것으로 합의했다. 즉, 일본과 러시아는 치시마 열도와 사할린의 영유권을 맞바꾸었던 것이다. 이 ‘카라후토-치시마 교환 조약’의 체결에 이르는 과정은 근대적인 국경 획정에 있어 역사적 연원과 실효적 지배와 같은 요소가 아니라 획정 당시의 국가 간 이해관계에 의해 국경이 그어지고 영토가 맞아떨어지는 사례가 있다는 점을 잘 보여 준다. 사실 사할린은 러시아와 일본 모두 이 섬과 자국의 역사적 관계를 제시할 만한 근거를 갖고 있지 않았던 변방의 섬이었던 것이다.

교환조약 체결로 러시아의 영토가 된 사할린은 시베리아 개척에서처럼 유형지(流刑地)로 활용되었다. 이 시기 사할린에 대한 가장 유명한 기록은 바로 러시아의 대문호 안톤 체호프(Anton Chekhov)가 1890년 직접 방문하여 쓴 『사할린 섬(Остров Сахалин)』(1895)이다.<sup>8</sup> 체호프가 기록한 것처럼, 사할

7 三木理史, 앞의 책(2006), 18쪽.

8 사할린의 선주민들은 문헌 기록을 남기지 않았기 때문에 근대 사할린의 역사 쓰기는 체호프의 이 조사보고서로부터 시작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한국어로는 동북아역사재단

린은 기존의 사회적 관계로부터 단절된 사람들의 땅이었다.<sup>9</sup> 사할린에서는 죄수, 간수, 공무원, 형기가 끝난 개척농민들, 어민들, 그리고 선주민 등이 그 척박한 땅에서 각기 살아가고 있었다. 일본인 어민들도 오호츠크해의 광대한 어장 때문에 여전히 사할린을 들락거렸다.

일본제국이 국운을 걸었던 1904~1905년의 러일전쟁은 사할린의 상황을 뒤바꾸어 놓았다. 10년 전 청일전쟁의 승전에도 불구하고 러시아가 주도한 삼국간섭으로 동북아시아의 요충지인 요동반도를 러시아에 빼앗겼던 일본은 절치부심 끝에 마침내 러시아와 일대 결전을 벌였다. 일본군은 요동반도 여순의 러시아군 요새를 함락시키고, 러시아 증원군을 만주의 중심부 심양에서 격퇴하고, 마지막으로 발틱함대를 대한해협에서 궤멸시켜 승리를 확정지었다. 승전의 대가로 일본은 요동반도 남단에 설정되어 있던 러시아의 요동 조차권을 가지고 와 10년 전의 삼국간섭에 대해 복수하는 데 성공했다. 아울러 러시아가 부설한 동청철도 남만주지선의 장춘-여순 노선도 전리품으로 획득했다. 또 일본이 대륙침략의 교두보이자 국방의 완충지대로 절실히 원했던 한반도에 대한 배타적 권리도 확보했다. 잘 알려져 있듯, 러일전쟁의 전후(戰後)처리 과정에서 대한제국은 1905년 일본의 보호국으로 전락했다. 조선의 보호국화와 함께, 또 하나 일본이 얻은 것이 바로 남부 사할린이다. 비록 조선은 아직 식민지가 아닌 보호국이었지만 조선과 남부 사할린은 똑같이 러일전쟁의 결과로 일본제국의 판도로 편입되었던 것이다.<sup>10</sup> 이렇게

---

번역총서로, 안톤 파블로비치 체호프(저), 배대화(역), 『안톤 체호프 사할린 섬』(서울: 동북아역사재단, 2013)으로 번역·간행되었다.

- 9 체호프가 왜 이 먼 외딴 섬에 관심을 갖게 되었는지는 그 자신이 직접 밝힌 바가 없어 후대 연구자·비평가들이 다양한 추론을 하고 있는데, 체호프에게 사할린이라는 신영토는 직접 가보지 않고서는 알 수 없는, 그래서 어떤 매력을 끄는 그런 공간이었을 것이다.
- 10 일본의 보호국이었던 대한제국은 결국 1910년 일본으로 병합되어 식민지가 되었지만, 일본이 대한제국을 병합하겠다고 결정한 것은 1908년에 이르러서였다. 즉, 보호국화가

보면 남부 사할린이야말로 한국 근대사와 직접적으로 연동했던 지역이라 할 수 있다.

일본군이 사할린을 공격한 것은 발틱함대의 패전으로 강화의 움직임이 러일 양국에서 나타나기 시작했을 때였다. 일본은 향후 종전 처리 과정에서 우위를 차지하기 위해 1905년 7월 기습적으로 사할린을 점령했다. 러시아 정·관계 내부에서도 ‘사할린 방기론’이 대두했는데, 이를 지지한 것은 대장성 대신 비폐였다. 그는 강화협상에 대해 ‘사할린은 방기할 수 있어도 배상금은 줄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다.<sup>11</sup> 종전 협상에서 일본은 사할린 전도(全島)를 요구했지만, 줄다리기 끝에 북위 50도를 기준으로 사할린을 남북으로 분단하여, 남부를 일본에 할양하는 것으로 귀착되었다. 1875년 ‘카라후토-치시마 교환 조약’ 체결 이후 30년 만인 1905년 일본은 사할린의 절반을 (일본의 입장에서는) 되찾게 되었던 셈이다. 이렇게 남부 사할린을 식민지로 획득함으로써 일본은 이미 ‘내지’로 편입되어 일본 본토가 되어 있던 홋카이도를 방어할 또 하나의 북방 완충지대를 갖추게 되었다.

남부 사할린은 대만에 이어 일본의 두 번째로 편입된 식민지였다. 이 무렵 일본은 사할린 섬을 ‘사·하·린’으로 부르기도 했지만 대체로는 ‘카라후토[樺太]’라 불러 왔었다.<sup>12</sup> 그래서 일본은 병합 후 자기식으로 식민지 사할린을 카라후토라 명명하고, 그 관할 통치 기구로 카라후토청[樺太廳]을 1907년 설치

---

곧 식민화로 이어질 필연적인 이유는 없었던 것이다. 일본의 조선 병합 결정에 대해서는 고바야시 미치히코의 논의를 참조할 수 있다. 小林道彦, 『政黨内閣の崩壊と滿洲事變: 1918~1932』(京都: ミネルヴァ書房, 2010).

- 11 ヤロスラフ・シュラトフ, 「ポーツマスにおけるサハリン」, 原暉之(編), 『日露戦争とサハリン島』(札幌: 北海道大學出版會, 2011), 191~193쪽.
- 12 이 카라후토도 사할린처럼 연원이 명확하지는 않은데, 바다 건너의 대륙, 특히 중국을 가리키는 ‘카라’와 사람을 가리키는 ‘히토’가 합쳐진 말, 즉 ‘唐人’이라는 설에서 보듯, 예전부터 일본의 영토로는 인식되지 않던 지역이었다. 三木理史, 『國境の植民地・樺太』, 東京: 塙書房(2006), 21쪽.

했다. 이하에서는 남북 사할린의 구별을 위해 역사적 용례에 따라 일본이 식민화한 남부 사할린을 ‘카라후토’라 하고, 러시아 영토로 남아 있던 북부 사할린을 ‘사할린’ 혹은 ‘북부 사할린’으로 하도록 하겠다.<sup>13</sup>

1855년 러일 공동관리 구역이었다가 1875년 러시아 영토로 편입되었던 사할린섬은, 30년 후인 1905년 남북으로 분단되어 북은 사할린, 남은 카라후토로 나뉘게 되었다. 이후 1945년까지 기본적으로 이 남북분단 체제가 유지된 것은 사실이나, 하지만 1917년 러시아혁명은 사할린-카라후토에 큰 변화를 몰고 왔다. 적군과 백군의 내전이 벌어지자 일본은 공산주의 혁명을 저지하기 위해 ‘시베리아 출병’이라는 이름으로 1918년부터 7만 명이 넘는 대규모 군대를 러시아에 파병했다. 일본군은 연해주는 물론이고 시베리아 깊숙한 곳까지 철도역과 항구를 중심으로 주요 교통요지를 점령했는데, 사할린의 맞은편 아무르강(흑룡강) 하구의 항구였던 니콜라옌스크(尼港)에도 일본군이 주둔했다.

1920년 1월, 결빙으로 고립되어 있던 니콜라옌스크를 적군 유격대가 공격하기 시작했다. 이 유격대에는 조선인 일리야 박이 이끄는 부대가 섞여 있었다. 소수의 일본군 수비대는 민간인들까지 합세시켜 기습 공격으로 유격대를 막아내려 했지만, 병력의 절대 부족과 결빙으로 인한 교통 두절로 항복하고 말았다. 이 과정에서 적군 유격대는 일본군은 물론이고 일본인 민간인, 그리고 백계 러시아인들을 대거 사살했다. 소위 ‘니항사건(尼港事件)’이었다. 일본군은 이 니항사건에 대한 보복을 위해 일본인의 안전을 명분으로 북부 사할린을 ‘보장점령’했다.<sup>14</sup> 시베리아 주둔 일본군은 1922년에 모두 철군했지만, 사할린 주둔군은 니항사건에 대한 항의 목적으로 파병된 것으로 시베

---

13 물론 이와 같은 구분은 설명을 위해 조작적으로 설정한 것으로, 당시 일본에서는 북부 사할린도 카라후토 혹은 북카라후토라 부르기도 했다.

14 三木理史, 『移住型植民地樺太の形成』(京都: 塙書房, 2012), 282쪽.

리아 과병군과는 관계가 없다고 하며 계속 주둔하다가 결국 1925년 「일소기 본조약」으로 수교를 맺고 나서야 철병했다. 즉, 일본은 1920년부터 25년까지 북부 사할린 보장점령을 통해 5년간 사할린 전도를 통치했던 것이다.

정리하면, 일본이 사할린에 대해 세력을 가졌던 시기는 1855년부터 1875년까지의 20년간의 전도 공동관리, 1905년부터 45년까지 40년 간의 남부 식민지배, 또 1920년부터 25년까지 5년간의 전도 통치로 나눌 수 있다. 일본의 시각으로 보면 1855년부터 1945년까지 총 90년 중 공동관리와 북부 ‘보장점령’ 시기를 합친 25년 동안 사할린 전도에 세력을 갖고 있었으며, 공동관리 20년과 남부 사할린 식민지배 40년을 합치면 90년 중 60년을 사할린에 어떤 형태로든 주권을 행사하고 있었던 셈이 된다.

이처럼 일본과 사할린의 관계는 1905년 남부 사할린 병합 후 45년 일본 패전에 이르는 40년간의 ‘카라후토사’로만 국한되지 않으며, 또 북부 사할린과 남부 사할린의 관계는 결코 단절적이지 않았다. 러일전쟁 종전 후 남북으로 나뉜 사할린은 1945년까지 별다른 사건 없이 분단된 채로 있었던 것이 아니었다. 일본군의 북부 점령에서 보듯, 주변 국제정세 변화에 따라 인구의 흐름도 바뀌었다. 일본군을 따라 북부 사할린으로 올라갔던 사람들은 철병이 결정되자 대거 카라후토로 남하하기도 했다. 사람들은 때로는 바다 건너 연해주와 홋카이도를, 때로는 사할린의 남북을 가른 북위 50도의 국경선을 넘나들었다. 카라후토의 주요 노동력 공급원이었던 조선인들은 이 북동 아시아 해역을 부유하는 존재들이었다.<sup>15</sup> 연해주의 조선인들은 러시아혁명의 혼란을 피해 카라후토로 이주하기도 했고, 홋카이도에서 카라후토로 넘어오는 조선인들도 있었다. 심지어 캄차카 반도에서도 조선인 인구가 포착되기도 했다.

---

15 조선인 어부들이 러시아 어업자에게 고용되어 사할린으로 들어온 것은 러일전쟁 전부터였는데, 이 초기 입도 조선인들은 블라디보스토크를 경유해 왔다고 한다. 三木理史, 앞의 책(2006), 61쪽, 104~105쪽.

### Ⅲ. ‘이주형 식민지’의 산업화

---

1905년 포츠머스 강화조약으로 러시아로부터 일본에 할양된 카라후토에 서는 2년여의 군정기를 거쳐 1907년 카라후토청이 설치되면서 식민지배가 본격화되었다. 카라후토에는 그보다 앞서 식민지가 된 대만과 달리, 총독부가 아니라 ‘청(廳)’이 식민지 통치기구로 설치되었다.<sup>16</sup> 엄연히 식민지였지만 총독부에 비해 권한이 약한 청이 카라후토에 설치된 이유는—향후 보다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인데—무엇보다 카라후토에는 선주민 인구 자체가 적어 일본으로서의 피지배 민족의 저항을 특별히 염려할 필요가 없었다는 데 1차적인 이유가 있었다. 그리고 일본 중앙정부에서는 카라후토를 홋카이도의 연장(延長)으로 보는 시각이 있었는데, 이는 카라후토가 1875년부터 1905년까지 러시아령이었던 점을 제외하고는 두 지역의 특징이 거의 유사하다는 점에서 나온 태도였다. 즉, 카라후토는 홋카이도와 같이 개척지이기 때문에 개척을 담당하는 청을 두어 통치하면 된다는 것이었다. 실제 카라후토는 영유 기년 내내 ‘내지편입’ 혹은 ‘내지화’ 문제가 제기되다가 결국 1943년에 내지로 편입되었다.<sup>17</sup>

카라후토의 내지편입이 계속 정치적 현안이 된 것은, 대만이나 조선과 달

---

16 일본제국의 외지에 설치된 ‘청’으로는 대만의 팽호제도를 관할하는 ‘팽호청’이 있었고, 또 요동반도 조차지인 관동주를 관할하는 ‘관동청’이 있었다. 후에 제1차세계대전 후 국제연맹 위임통치령으로 일본이 관리하게 된 남양군도에도 ‘남양청’이 설치되었다. 이처럼 식민지 별로 관할 통치기구에 차이가 있는 것에 대해 시오데 히로유키는 “통치 상 요청의 상이와 관계”가 있다고 보았다. 塩出浩之, 『越境者の政治史: アジア太平洋における日本人の移民と植民』(名古屋: 大學出版會, 2015), 178쪽.

17 홋카이도와 오키나와는 패전 후에도 일본 영토로 인정받아 현재에 이르고 있는데, 일본의 내지 중 유일하게 카라후토만 반환되어 다시 소련의 영토가 되었다. 카라후토의 내지편입은 1855~1875년의 공동관리와 함께, 현재 일본 일각에서 카라후토에 대한 영유권을 주장하는 근거로 작용하고 있다.

리 카라후토의 인구는 식민자인 일본인들이 절대 다수였기 때문에 인구 구성에 있어 내지와 별반 차이가 없었기 때문이다. 즉, 카라후토는 주인 없는 ‘무주지(無主地)’로서 일본에 의해 개척되어야 할 프론티어로 인식되었던 것이다. 그래서 카라후토는 식민지 시기에 ‘이주형 식민지’로 규정되어, 일본인 농민의 이주에 의한 농업 개발이 카라후토청 차원에서 추진되었다.

일본에서 ‘이주형 식민지’는 도쿄제국대학 경제학부의 야나이하라 다다오 [矢内原忠雄]에 의해 논제로 부상했다. 식민정책학 강좌의 담임 교수였던 야나이하라는 경제의 측면에서 식민지는 ‘이주형 식민지’와 ‘착취·투자형 식민지’로 나뉠 수 있다고 했다. 우선 ‘착취·투자형’은 식민지에 산업 생산에 투입할 수 있는 자원과 노동력이 존재하여 본국으로부터 자본이 투자되면 노동력의 착취를 통해 생산력을 높여 가는 방식으로 식민지가 경영되는 유형이다. 일본의 식민지에서는 조선과 대만, 그리고 만주국이 이에 해당한다. 반면 ‘이주형’에서는 식민지의 인구 규모가 산업생산에 동원할 만큼 충분하지 않아 본국의 인구를 식민지로 이주시켜 정착하도록 해야 했다. 일본의 식민지에서는 남양군도와 카라후토가 그러했다. 이 경우에는 농업이든 공업이든 생산에 필요한 노동력은 대부분 본국에서 온 이주자들로 충당되었다.

그런데 일본제국은 주요 식민지가 일본 본국 인근에 있었다는 점을 들어 ‘근린 제국주의’로 규정하여, 이 인접성이 일본 제국주의의 특징을 구성한다는 논의가 있다. 근린 제국주의에서 눈에 띄는 점은 바로 본국과 식민지 간의 인구 이동이 활발하다는 점이다. 본국에서 식민지로 이주한 식민자(colonizer)의 규모가 원거리 제국에 비해 대단히 크며, 또 그 반대의 흐름, 즉 식민지에서 본국으로 이주한 식민지 출신 노동자의 규모도 크다. 일본제국의 가장 인근 식민지인 조선의 경우가 바로 그러했다. 일본에서 이주하여 조선에 정착한 일본인의 인구수는 1945년 무렵 100만 명에 이르렀으며, 일본으로 이주한 조선인의 인구는 같은 시기 거의 200만 명에 달했다. 이 조선

이주·정착 일본인, 즉 ‘재조(在朝) 일본인’의 존재에 주목하여 일본의 조선 식민지배를 ‘정착 식민주의(settler colonialism)’로 파악하기도 한다. 정착 식민주의는 식민지로 이주한 식민자들이 더 이상 본국으로의 귀환을 염두에 두지 않고 식민지 사회의 일원으로 정착하는 태도를 가지며, 그에 따라 종종 본국의 이해에 반하는 정치적·경제적 요구를 관철하고자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sup>18</sup> 그런 탓에 때로는 피식민자(colonized)의 일부 집단과 연합하기도 하지만, 정착 식민자들은 식민지 사회에서 상위 계급의 지위를 차지하며 피식민자들에 대해 정치적·경제적 권력을 행사한다.

야나이하라 타다오가 말한 ‘이주형 식민지’는 이 정착 식민주의와는 결이 다르다. 이주형 식민지는 식민자들이 정착 경향을 보이는 것은 동일하지만, 이 식민지에는 식민자들이 지배 권력을 행사하고 경제적으로 착취할 만한 피식민자 집단이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이주형 식민지에서는 식민자와 피식민자 간의 정치적·경제적·문화적 투쟁이 벌어지지 않으며, 피식민자들의 민족적 저항도 없거나 미약하다. 카라후토가 바로 ‘이주형 식민지’로, 어떻게 보면 ‘식민(植民)’의 원의미에 가장 가까운 식민지였다고 하겠다.<sup>19</sup>

카라후토청에서는 일찍이 일본인의 카라후토 이주·식민을 정책적으로 추진했다. 이주 농민들이 토지를 개간하여 농업생산력을 확대함으로써 새로운 영토를 개척한다는 발상은 ‘척식(拓殖)’이라는 말로 표현되었다. 척식은 근

---

18 1930~1940년대 조선의 일본계 언론에 종종 등장하는 ‘半島人’이라는 표현은 조선인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재조일본인도 포함하는 것으로, 사실 재조일본인들이 조선의 이익을 추구할 때 자신들과 조선인들을 하나로 묶는 데 활용된 표상이었다. 즉, 반도인의 발화자는 재조일본인들이었다.

19 그래서 야나이하라 타다오는 이민과 식민을 사실상 동일한 것으로 간주했다. 그가 말하는 ‘식민’은 이민족에 의한 지배나 동화 정책과 같은 정치적·문화적 권력 행사를 의미하지 않았다. 야나이하라는 이민과 식민을 보다 나은 생활기회를 찾아 이동하는 사람들의 자연스러운 사회적 과정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塩出浩之의 논문 「内外原思想の形成と研究—帝国日本の移民と植民」(立命館大学 博士学位論文, 2015)을 참조할 것.

대 시기에 창안된 일본 특유의 용어로, ‘척지식민(拓地殖民)’의 약자이다.<sup>20</sup> 토지를 개척하여 인구를 번성시킨다는 의미로, ‘농민의 이주에 의한 농지의 개간’이 척식의 가장 원형적인 상(像)이었다. 하지만 카라후토 척식을 통한 농업 개발은 그다지 성과를 내지 못했다. 무엇보다 일본 본토의 농민들이 카라후토까지 이주해 올 경제적 유인이 없었기 때문이었다. 더 아래에 있는 홋카이도 척식 사업도 남부 지역만 어느 정도 개발되는 데 그치고 있었기에 더 춥고 더 먼 카라후토 농업 개발이 성공하기는 어려운 상황이었다.<sup>21</sup>

어업은 카라후토가 일본의 식민지가 되기 훨씬 이전부터, 그리고 후에 펄프 산업이 등장하기 이전까지 사할린섬을 대표한 산업이었다. 1875년까지 러일 공동관리 시기에 러시아인들과 일본인들 간에 발생한 마찰은 대체로 어업권을 둘러싼 어민들의 갈등에서 비롯되었다. 지금도 세계적인 어장으로 이름있는 오호츠크해의 일부인 사할린 해역은 청어를 비롯해 명태, 연어 등이 풍부하여 일본 어업계가 적극적으로 진출했다. 또 1905년까지의 러시아 통치기에도 일본 어민들은 사할린 연안을 들락거렸고, 남북으로 분단된 이후에도 북부 사할린 해역까지 올라가서 어로작업을 했다.

어업 관계자들은 어획 방식을 둘러싼 경제적 이해관계에 대해 적극적으로 행동에 나섰다기 때문에 어업이야말로 카라후토의 지역성을 형성하는 데 매우 중요한 산업이었다. 어업의 이해관계는 내지편입 문제를 중심으로 카라후토의 정치적 현안과 직결되어 있었다. 카라후토 어업의 주도권을 갖고 있던 것

20 ‘拓殖’의 拓은 한국어에서 ‘척’이나 ‘たく’으로 발음될 수 있는데, 일본어에서 拓殖을 ‘たくしょうく’로 읽는다는 점에서 ‘たく’으로 읽어야 한다는 견해도 있다. 하지만 ‘東拓’의 사례에서 보듯, 식민지 시대부터 조선에서는 拓殖을 ‘척식’으로 발음해 왔기 때문에 여기에서도 그 역사적 용례에 따라 척식으로 표기했다.

21 中山大將은 카라후토의 산업개발이 어업과 탄광을 중심으로 진행된 것은 사실이지만, 그 근간에는 농업을 통한 이민사회의 형성 과정이 있었다고 보며 카라후토의 농업이민사에 대한 관심을 촉구했다. 中山大將, 앞의 책(2014)의 서장.

은 정치망(定置網) 어업회사들이었다. 정치망 어업은 특정한 장소에 그물을 고정시켜 어획을 하는 것으로, 어망을 설치하는 데에는 다액의 자본이 투자되어야 했다. 어망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카라후토청의 허가를 받아야 했는데, 이에 대해 청에서는 세금을 부과하여 재정수입에 충당했다. 따라서 정치망 회사들과 카라후토청은 이권의 배분에 대해 공통의 이해관계를 갖고 있었다. 이에 반해 소규모 자본의 어민들은 유자망(流刺網)으로 어획을 해야 했다. 유자망은 배를 타고 나가 적당한 곳에 그물을 던져 어획을 하는 방식이라, 정치망과 달리 어망 설치 비용이 들지 않기 때문에 자금이 충분하지 않은 어민들이 주로 활용했다. 하지만 카라후토청은 남획을 이유로 관할 해역에서의 유자망 어업을 금지했다.<sup>22</sup>

1920년대 초부터 일본 중앙정부에서는 행정정리의 일환으로 카라후토의 내지편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시작했다. 이는 곧 카라후토에서도 중대한 현안으로 부상했는데, 어법(漁法)제도 문제(‘魚制改革問題’)가 결합되어 정치적 사안으로까지 확대되었다. 중앙정부가 마련한 카라후토 내지편입 방안 중 유력한 것은 홋카이도청과 카라후토청의 통합이었다.<sup>23</sup> 북방의 개척지로 사회적 조건과 산업 구조가 비슷한 두 지역을 통합하여 홋카이도청에서 관할하는 방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런데 일본 내지의 다른 지역과 마찬가지로 홋카이도에서는 정치망과 유자망 모두를 어법으로 인정하고 있었는데, 만약 내지편입에 의해 카라후토청이 홋카이도청으로 통합된다면 홋카이도의 내지 어법이 적용될 것은 당연히 예상되는 일이었다. 즉, 통합이 된다면 앞으로 카라후토에서도 내지처럼 유자망 어업이 가능하게 될 것이었다. 그래서 유자망을 중심으로 하는 소자본은 내지편입을 적극 환영했고, 그에

---

22 塩出浩之, 『日本領樺太の形成』, 原暉之(編), 앞의 책(2011) 233~235쪽.

23 위의 글, 225~226쪽.

반해 카라후토청의 정치망 허가를 통해 어장을 독점하고 있던 대자본은 내지편입안에 대해 격렬히 반대했다.<sup>24</sup> 또 카라후토청은 조직의 존폐가 걸린 문제였기 때문에 정치망 어업계와 이해를 함께했다.

이처럼 카라후토의 어업은 카라후토 지역민들이 각 집단의 경제적 이해관계를 둘러싸고 정치 투쟁을 벌이는 장(場)이기도 했다. ‘어제개혁문제’는 내지편입안이 카라후토의 지역성을 표출하고 창출하는 기폭제로 작용했던 것이다. 거기에 참정권 문제까지 더 해져 내지편입안은 더욱 논쟁을 증폭시켰다. 일본인이 인구의 절대 다수를 차지하는 카라후토였지만, 카라후토 지역민들에게는 참정권이 주어지지 않았다. 조선인들도 일본 내지에 거주하고 있을 경우 참정권을 행사할 수 있었지만, 카라후토의 일본인들은 일본인임에도 외지에 있다는 이유로 선거에서 배제되었던 것이다.

카라후토 지역민들은 지역의 이해관계를 대변할 제국의회 의원의 필요성을 절감하여 제국의회 선거에 대한 참정권을 요구했는데, 이 지점에서 내지편입 문제와 결부되었다. 내지로 편입된다면 참정권 문제는 자연스럽게 해결될 것이기 때문이었다. 이는 정치망 어업을 중심으로 조직되어 있던 카라후토의 지역 유력자들에게 의회 참정권과 독점 어업권을 맞바꿔야 한다는 딜레마를 안겨 주었다.<sup>25</sup> 이와 같은 지역 내 이해관계의 대립과 딜레마는 카라후토의 개발 정책이 계속 지연되는 하나의 요인으로 작용했다.

카라후토 척식 사업은 농업보다는 임업에서 동력을 찾았다. 사할린에는 광대한 원시림이 거의 전도에 펼쳐져 있었다. 카라후토청과 일본 기업들이 이 무궁무진해 보이는 목재 자원에 주목하고, 임업 개발에 착수했다. 그런데 카라후토 임업 개발은 난관에 부딪히게 되었다. 사회간접자본(SOC)이 크게

---

24 위의 글, 235쪽.

25 塩出浩之, 앞의 책(2015), 185쪽.

부족했기 때문이었다. 특히 항만과 철도를 중심으로 한 교통망의 미비는 카라후토의 산업화에 근본적인 제약 요인으로 작용했다. 식민지 임업 개발이라고 하면 흔히 무분별한 벌채로 확보된 원목이 대량으로 항만을 통해 반출되는 장면을 떠올리겠지만, 카라후토에서는 교통 인프라가 구축되지 못했던 탓에 원목의 대량 반출은 극도로 제한되었다. 벌채를 하더라도 수송을 할 수 있는 철도망이 완비되지 못했고 또 항만 축항도 더뎠기 때문에, 부피가 크고 무거운 원목을 수송하는 데 큰 비용이 들었던 것이다. 그래서 카라후토산 원목은 다른 지역의 원목에 대해 가격 경쟁력을 가지지 못했다. 더구나 카라후토의 항구 대부분은 추위로 인해 결빙 기간이 길어 어려움을 가중시켰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카라후토의 막대한 산림 자원을 마냥 방치해둘 수는 없었다. 이 산림 자원의 활용 방안을 마련한 것은 바로 제지 산업계였다. 제지 회사들은 카라후토의 목재를 원목에 비해 가볍고 부피도 적은 펄프로 가공하면 수송비 문제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했다. 게다가 카라후토 산림의 대부분은 펄프의 원료인 셀룰로스를 충분히 함유하고 있는 침엽수림이었기 때문에 카라후토는 펄프를 생산하는 데 최적의 원료를 제공할 수 있는 적지(適地)였다. 원목을 가공하여 생산된 펄프는 원목에 비해 수송비가 훨씬 저렴하면서도 부가가치가 더 높았기 때문에 카라후토에서의 펄프 생산은 충분히 경제성이 있는 사업이었다. 원료 공급지인 카라후토 현지에 생산 설비를 구축하여, 현지 생산 펄프를 일본으로 이출하는 방식이라면 수익성을 담보할 수 있었다. 일본 제지업계 1위의 오지제지(王子製紙)는 카라후토의 유일한 부동항인 오도마리항[大泊港] 인근에 펄프 공장을 세워 생산을 개시했다. 생산된 펄프는 오도마리항을 통해 일본 내지로 이출되었다.<sup>26</sup>

---

26 이상 카라후토의 제지업에 대해서는 山口明日香, 「戦前期日本の製紙業における原料調達」, 『三田學會雜誌』105-2(2012), 109~137쪽을 참조할 것.

카라후토에 제지 회사들이 잇달아 펄프 공장을 설치하면서 카라후토는 일본 펄프 산업의 주요 거점 지대가 되었다. 이는 사탕수수의 원산지였던 대만이 식민화 이후 일본계 제당 기업의 집중 투자로 세계적인 제당 생산지가 된 것과 유사한 방식이었다. 대만이 사탕수수를 원료로서 그대로 판매한 것이 아니라, 현지에 제당 공장을 세워 설탕으로 가공하여 수·이출한 것처럼, 카라후토도 목재를 원목으로 반출하는 방식이 아니라 현지 공장에서 펄프로 가공하여 판매했던 것이다. 그런데 대만의 경우, 설탕의 원료인 사탕수수를 대만 농민들이 생산하여 제당회사들이 매입을 하는 구조를 가졌기 때문에 제당 산업은 대만의 농업생산 구조와 긴밀히 연관되어 있었다. 하지만 카라후토의 펄프 산업은 농민의 생산물을 원료로 사용한 것이 아니라 제지회사들이 직접 벌채를 하여 원료를 마련하는 방식이었기 때문에, 대만과는 식민지 경제의 성격이 달랐다.

카라후토의 개발에 있어 광업 또한 큰 비중을 차지했다. 앞에서 논의한 임업과 마찬가지로 광업도 대표적인 식민지 수탈 산업으로 알려져 있다. 공업화가 진전되지 않은 식민지에 대해 제국 본국의 자본이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수단은 원료로 사용할 수 있는 부존자원의 획득이었기 때문에 임업과 광업은 식민화 초기부터 일찍이 발달했다. 목재와 광산물은 그 수량이 제한되어 있다는 인식으로 인해 수탈의 상을 더욱 강화시켰다. 조선의 경우에도 구한말의 소위 ‘열강의 이권침탈’에서 주된 대상은 광업권과 벌채권이었던 것처럼, 카라후토에서도 목재와 광산물은 식민화 초기부터 개발 대상이 되었다.

그런데 카라후토의 광업은 임업과 마찬가지로 카라후토 현지의 사정으로 개발에 제약을 받고 있었다. 제약 조건은 크게 두 가지였는데, 하나는 수송 문제였고 다른 하나는 노동력 문제였다. 먼저 수송 문제의 경우, 철도가 충분히 부설되지 않았기 때문에 규모의 경제를 달성할 수 있는 집하장을 마련하지 못하여 각 탄광은 개별적으로 집하 항구를 마련해야만 했었다. 거기에 대

부분의 항구들은 접안 시설이 부족하고 또 결빙 기간도 길어 자칫 광산물을 항만 인근에 장기간 적치해 두어야 할 수도 있었다. 광산물의 철도 수송과 선적, 해상 운송 등의 유통 과정에 있어 카라후토는 유리한 점이 없었던 것이다. 게다가 카라후토는 광산에 직접 들어가 채굴 작업을 할 노동력을 확보하기가 쉽지 않다는 치명적인 문제도 안고 있었다. 식민지 광산에서는 피식민자의 저임금 노동력을 활용하여 채굴하는 것이 통상적인 방식이었지만, 카라후토에는 선주민 인구가 극히 적었기 때문에 필요 노동력의 대부분을 외부에서 도입해야만 했다. 이때 일본인 광부들과 더불어 노동력 공급원이 되었던 것이 바로 조선인들이었다. 조선인들은 192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알선모집 방식을 통해 카라후토의 광산으로 왔다.<sup>27</sup> 조선인 광부의 대부분은 조선 현지에서 모집되었는데, 일부는 일본 내지에서 건너오기도 했다. 초기에는 언어 문제로 탄광 깊숙이 들어가지 않고 일본인 광부들에 의해 채굴된 석탄을 열차에 상차하는 정도의 보조적인 일을 했지만, 나중에는 갱도를 타고 막장까지 내려가 채굴 작업을 했다. 조선인 광부들이 주로 작업하던 탄광은 카라후토의 중심부인 남부 지방보다는 중부와 북부 등 오지 지역에 위치해 있었다.<sup>28</sup>

이처럼 수송망이 미비하고 노동력이 부족했기 때문에 카라후토의 광업은 활성화되지 못했다. 일본의 석탄 수요는 규슈와 홋카이도를 비롯한 내지의 탄전과 만주의 세계적인 노천탄광으로 만철이 운영하던 무순 탄전에 의존했다. 그래서 카라후토청에서는 영업 성적이 부진한 탄광들에 대해 광업권 회수나 탄전 폐쇄, 휴업조치 등의 행정명령을 내려 도내(島内) 석탄산업을 대거 정리했다.

---

27 카라후토에서 조선인의 증가는 1917년 미쓰이광산주식회사 가와카미[川上]광업소가 조선에 모집책을 파견하여 광부 110명을 들여온 것을 시작으로 한다. 三木理史, 앞의 책(2012), 277~278쪽.

28 위의 책, 285~287쪽.

그럼에도 운영이 되던 탄광들은 카라후토 지역의 내수용 석탄을 공급하는 탄전들이었다. 바로 카라후토의 주력 산업인 펄프 공장에서 석탄이 필요했던 것이다. 목재를 가공하여 펄프를 생산하기 위해서는 화학처리와 열처리 공정을 거쳐야 했는데, 이를 위해서는 에너지원이 필수적이었다. 카라후토의 석탄은 수송 문제로 인해 도외(島外) 이출은 채산성이 맞지 않았지만, 도내 소비라면 큰 문제가 없었다. 그래서 카라후토에 펄프 생산시설을 마련한 제지회사들은 카라후토탄(樺太炭)의 최대 고객이 되었다. 일부 회사들은 직영 탄전을 마련하여 펄프 생산을 계열화하기도 했다. 이와 같이 카라후토의 광업은 적어도 1930년대 전반까지 독자적인 산업이라기보다는 카라후토의 주력 산업인 펄프 생산체제의 일부로 기능하는 데 그치고 있었다.

#### IV. 카라후토 개발계획의 등장과 척식회사의 설립

---

1905년 일본제국의 식민지가 된 카라후토는,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다른 식민지들과는 상이한 특징을 갖고 있었다. 카라후토의 역사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식민지임에도 피식민자 집단이 거의 영향력을 갖지 못할 만큼 수가 적어, 인구의 절대 다수가 일본인과 조선인으로 구성된 대표적인 이주형 식민지였다고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sup>29</sup> 그런데 통상 이주형 식민지는 농지의 개척을 통해 농업을 주력 산업으로 하지만, 카라후토는 농업이 민이 그다지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대신 오호츠크해의 어장을 대상으로 한 어업과 막대한 원시림을 기반으로 한 임업이 발달했다. 카라후토 임업의 특

---

29 1926년에 이르면 조선인이 카라후토 인구의 약 10%(4,387명)를 차지했다. 위의 책, 267쪽.

정은 교통 인프라의 미비라는 제약을 극복하는 수단으로 원목 판매가 아니라 목재를 원료로 한 펄프 산업을 중심으로 했다는 점이다. 펄프 산업은 카라후토 경제를 지탱하는 기간 산업이었는데, 1930년을 전후하여 변화를 모색해야 할 상황에 이르렀다.

### 1. ‘카라후토척식계획’의 입안, 1931~1933

카라후토의 산업화는 1915~1916년경부터 어업 중심에서 펄프 생산을 기축으로 한 공업 중심으로 전환되었다.<sup>30</sup> 대자본에 의한 펄프 산업은 그 이후 1920년대 내내 카라후토 경제에서 절대적 비중을 차지했다. 펄프 산업은 카라후토의 광대한 산림에서 나오는 목재를 ‘원지 처리’하는 방식으로 경쟁력을 갖추었다. 그런데 1920년대 후반에 이르면 카라후토의 펄프 산업이 어려움에 봉착하기 시작했다. 1920년대 전반기에 일본의 양지(洋紙) 수요가 크게 증대하자 각 제지회사들은 펄프 생산을 대폭 확대했을 뿐만 아니라 해외 수입량도 크게 늘렸다. 이는 결국 1920년대 중엽에 이르면 공급 과잉을 낳았다. 재고가 누적되면서 양지 가격이 대폭 하락하자 제지회사들 간의 가격경쟁이 극심해졌다. 회사들로서는 가격경쟁을 위해 무엇보다 저렴한 펄프 원료를 확보하는 게 관건이 되었다. 이때 주목을 받은 것이 바로 카라후토의 목재였다.<sup>31</sup>

펄프 가격을 맞추기 위해 카라후토 목재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자 카라후토 입목지에 대한 벌채 신청도 크게 증대했다. 처음에는 병충해 확산을 막기 위한 ‘방지채벌’ 과정에서 나온 저렴한 원목을 대량으로 구입해 가던 업자

---

30 위의 책, 307쪽.

31 山口明日香, 앞의 글(2012), 126쪽.

들이 이제는 일반 입목지에 대해서도 벌채를 요청하여 허가를 받기 시작했다.<sup>32</sup> 벌채업이 대개 그렇듯이, 이 과정에서 허가 면적을 넘어 나무를 베어가는 부정 벌채도 횡행했다. 결국 1926년 이후 일본 내지의 펄프 원료용 목재의 95~100%를 카라후토에서 공급하게 되었으며, 또 1930년에는 조선과 홋카이도를 포함한 제국 전체 공급량의 80%를 카라후토 목재가 차지하게 될 정도였다.<sup>33</sup> 이렇게 되자 무궁무진해 보이던 카라후토의 산림도 점차 한계를 보이기 시작했다.<sup>34</sup> 카라후토청에서 1931년 「카라후토척식계획안[樺太拓殖計劃案]」을 입안한 것은 이러한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서였다.

「카라후토척식계획안」은 카라후토청이 자체적으로 마련한 것으로, “카라후토의 재정을 유지하는 펄프공장도 입목의 감소에 따라 가까운 장래에 정리할 시기가 도래할 것이 명료”하므로, “카라후토척식의 종합적 방침을 수립하여 제반 시설의 정비개선을 도모”하기 위해 척식사업의 계획화를 추진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했다. 카라후토청에서는 “기존 산업[입업]의 합리적 개량발달”과 더불어 “신흥산업의 창시조성 등에 노력하여 적극적 척식식민의 길을 강구해야” 한다고 하며 10개년 추진을 목표로 한 척식계획을 세웠다.<sup>35</sup>

카라후토청이 이렇게 자체적으로 척식계획을 추진하고자 한 것은 청 재정의 절대적인 부분을 펄프 산업에 의존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벌채량 증대 → 입목림 감소 → 펄프생산 감소 → 재정수입 감소’의 과정이 예상되었기 때문에 청정(廳政)의 운영을 위해서라도 입목 벌채를 체계적으로 관리해야만 했다. 그리고 펄프 단일 산업에 대한 의존을 탈피하기 위해 산업구조를 다각화할

32 三木理史, 앞의 책(2012), 309쪽.

33 山口明日香, 앞의 글(2012), 126~128쪽.

34 竹野學, 「人口問題と植民地: 1920・30年代の樺太を中心に」, 『經濟學研究』 50-3(2000), 128쪽.

35 三木理史, 앞의 책(2012), 309~310쪽. 이 1931년 「樺太拓殖計劃案」은 홋카이도립문서관 소장 「樺太庁文書」에 수록되어 있으나, 원문서를 확인하지 못하여 이 미키 마사후미의 글에서 재인용했다.

필요성도 제기했다. 이러한 카라후토청의 개발계획은 1933년에 이르러 청 수준을 넘어 중앙부처 차원에서 보다 구체화되었다.

1933년 4월 카라후토청의 관할 부처인 척무성에서는 ‘카라후토척식조사위원회’를 설치하여 카라후토 개발의 기본 방침을 마련하고자 했다. 척무대신 나가이 류타로[永井柳太郎]를 회장으로 척무성·대장성·카라후토청의 고등관 관료 및 제국대학 교수를 비롯한 학식자·경험자를 위원으로 한 ‘카라후토척식조사위원회’가 1933년 3월 출범했다(이하 ‘척식위원회’로 약칭). 위원회는 “[카라후토는] 홋카이도 척식사업과 대비하여 척식 상 확호(確乎)한 근본 방침과 조직적 계획이 결여된 경향”이 있어 “이에 카라후토 척식에 관한 방침을 수립하고 그 수행에 도움을 주기 위해 … 제반의 사항에 관해 충분한 조사 심의”하는 것을 목적으로 설치되었다.<sup>36</sup> 척식위원회의 주요 심의 사항은 다음과 같다.<sup>37</sup>

- 카라후토 척식에 관한 일반 방침
- 카라후토의 농업·임업·광업·목축업·수산업 등 산업개발에 관한 방침
- 카라후토의 교통·통신 사업의 정비에 관한 방침
- 카라후토의 식민(植民) 사업의 발전에 관한 방침
- 카라후토의 재정정리 및 세입재원의 함양에 관한 방침
- 카라후토의 금융의 편리 증진에 관한 방침

척식위원회는 5개 부(部)로 나뉘어 자문 요청 사항에 대해 부별로 현지조사와 심의를 진행했다. 제1부는 농축산업 및 식민, 제2부는 임업, 제3부는 수

---

36 拓務省, 「樺太拓殖調査委員會廢止ノ件」(1933b).

37 拓務省, 「樺太拓殖調査委員會設置ノ件」(1933a).

산업, 제4부는 광업, 제5부는 교통·통신 인프라 및 금융·재정에 관한 사항을 조사·자문하는 것으로 구성되었다. 각 부에서는 ‘답신 및 설명서’를 작성하여, 같은 해 9월 척무대신에게 카라후토척식의 방안에 대해 의견을 제시했다. 그 중 카라후토의 지역적 특징과 관련한 사항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농축산업 및 식민(이민)에 대한 척식위원회의 의견은 대체로 다른 농업이민 정책과 그 기초를 같이하지만, 몇 가지 점에서 카라후토의 지역성을 반영하고 있다. 우선 카라후토는 아한대 기후에 산성토양이기 때문에 일반 작물을 재배하기에 적합하지 않으나 특용작물이나 특수농업을 하기에는 문제가 없으며, 토지를 적절히 개량한다면 농업은 물론 축산업도 사업화가 가능하다는 견해를 제시했다. 카라후토는 삼림과 어업 자원이 고갈되어 감에 따라 농업 개발이 시급한 과제이나, 한랭지 농업은 일본인들에게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정부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그리고 이주 정책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소농을 위주로 하나 자본을 집약시킬 수 있는 자작 중농과 대농 경영도 장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일본 이민정책과 농업정책의 기본 원칙은 소작쟁의 방지를 위한 자영농의 육성에 있었는데, 카라후토에는 소농만이 아니라 중농이나 경영 규모가 큰 대농도 유지해야 한다고 본 것이다. 다만 위원회에서는 “큰 면적의 토지를 획득하여 그것을 다시 분할하여 타인에게 대여하는 것”, 즉 소작은 “절대적으로” 금지해야 한다고 하며, 일본 농촌 문제의 근원으로 지적된 소작제가 카라후토에서도 재연되는 것에 대해서는 단호히 반대했다.<sup>38</sup>

한편, 임업에 대해서는 현재 카라후토의 삼림은 식민화 초기에 비해 절반이 소실되었으며, 특히 남부 지역은 황폐화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카라후토

---

38 「樺太拓殖調査委員會答申及説明書 第一部」[拓務省, 「樺太拓殖調査委員會廢止ノ件」(1933b)의 부속 문서].

에서 임업은 공업, 수산업, 농업, 광업 등 전 산업의 근간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임정개혁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현재 삼림의 상황을 봤을 때 연간 채벌량 1,108만 석이 적절헌데, 계획적 관리가 이루어진다면 조금 더 증가시키는 것도 가능하다고 보았다. 그런데 최근 펄프, 건재, 갱목 등에 대한 수요가 매년 급증하고 있기 때문에 삼림 보존의 체계화를 도모하되, 목재를 많이 소모하는 제지회사나 광산회사에는 자체 조림사업을 의무로 부과해야 한다고 건의였다. 그리고 카라후토 삼림의 소실을 막기 위해서는 북부사할린, 연해주, 만주 등 해외에서 목재를 수입해서 도내(島內) 펄프 수요에 충당하는 것도 고려해야 한다는, 카라후토의 이미지와는 다른, 다소 의외의 주장을 했다. 척식 위원회에서는 합리적이고 적극적인 관리를 통해 더 이상의 삼림 소실을 막는다면 향후에도 적절한 목재 공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나, 카라후토의 가장 중요한 산업인 펄프공장에의 원활한 원료 공급을 위해서는 현재 수요급증으로 부족한 목재는 당분간 수입을 해서라도 충당해야 한다고 제언한 것이다.

그리고 광업의 경우, 위원들은 카라후토의 광업 개발은 카라후토의 산업 발전만이 아니라 “국책상으로도 극히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카라후토는 거의 전역에 50억 톤에 이르는 양질의 석탄이 매장되어 있으며 연간 500만 톤의 생산이 가능하나, 현재 카라후토의 경제발전 수준에서는 60만 톤 정도만 도내에서 소비되고 있기 때문에 이를 적극적으로 외부로 반출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특히 본토에서 생산되는 내지탄(內地炭)은 탄광의 노후화로 수요를 감당하지 못하고 있어 해외 수입이 불가피한 상황인데, 이를 카라후토탄(樺太炭)으로 보완한다면, 국가적으로 크게 도움이 될 것이라 보았다. 이 답신서에서 말한 카라후토의 석탄이 “국책상” 중요하다는 말은 전쟁 물자로서가 아니라 무역수지를 개선하는 데 일조할 수 있다는 의미이다. 이 시점에서 카라후토척식에서의 탄광 개발은 아직 전쟁을 염두에 둔 것은 아니었다. 한

편, 위원회에서 카라후토의 광업 개발에 대해 탄전 관리 이외 제안한 것은 석탄액화산업에 대한 투자였다. 앞서 살펴봤듯이, 카라후토는 철도·항만 시설이 부족하여 목재의 경우에도 원목 수이출이 아니라 펄프 현지 생산으로 삼림자원을 활용해야만 했다. 석탄도 목재처럼 풍부했지만 교통망의 한계가 있었기 때문에, 펄프처럼 현지에서 가공하여 부가가치를 높이는 방식이 적절하며, 이 경우 석탄액화산업이 적격이라고 판단했던 것이다.

척식위원회에서 중점적으로 다룬 카라후토 개발의 주된 대상은 임업과 광업이었다. 임업의 경우 1920년대에 이미 일본제국의 대표적인 펄프 원료 생산지로 자리를 잡은 상황이었다. 광업에 대해서는 석탄의 내지 공급 확대와 석탄액화산업 진흥 등을 논의하고 있는데, 임업과 광업 모두 소위 ‘연료식민지’로서 카라후토의 산업발전을 추진할 것을 제안한 것이라 하겠다. 이는, 미키 마사후미가 지적한 ‘내지화와 외지화의 분리 지향’이라는 카라후토의 지역적 특징을 잘 보여 준다.<sup>39</sup> 앞에서 언급했듯이, 카라후토는 영유 초기부터 내지화 문제가 거론되어 1920년대 초부터는 단속적이지만 줄곧 내지화 문제가 지역의 가장 중요한 정치적 현안으로 제기되었다.<sup>40</sup> 카라후토는 인구의 절대다수가 일본인이었기 때문에 참정권을 비롯한 일부 사항을 제외하고는 내지법이 거의 그대로 적용되어 굳이 ‘외지’로 둘 필요가 없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카라후토는 사회적으로는 내지화 지향이 작용했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연료식민지화가 더욱 강화되어 갔는데, 이는 식민지 경제의 전형적인 특징이라는 점에서 ‘외지화’로 규정할 수 있는 것이다.

---

39 三木理史, 앞의 책(2012), 306쪽.

40 竹野學, 앞의 글(2000), 119쪽.

## 2. 국책특수회사 ‘樺太開發株式會社’의 설립, 1941

척식위원회의 답신에서 반드시 검토해야 할 부분은 금융 문제이다. 왜냐 하면 척식사업과 같은 정부의 대규모 정책에는 막대한 재원이 소요되기 때문에 자금을 어떻게 조달할 것인가가 관건이기 때문이다. 중앙정부의 재정을 투입할지, 지역행정기관의 예산을 투입할지, 아니면 시장을 통해 민간 투자를 받는지 하는 것은 정책 수행에 있어 무엇보다 중요한 문제라 하겠다. 척식위원회의 ‘답신 및 설명서’에서 이 문제를 다룬 것은 ‘제5부 금융’ 편이다.

금융 편에서는 산업조합의 증설, 어업금융의 개선을 논의하고, 이어 공설 전당포(質屋)와 무진업의 강화를 제안한다. 이 네 기관으로는 대규모 자금을 필요로 하는 경제개발 정책의 자금 조달 방안으로는 불충분한데, 마지막 항목인 ‘기업금융(起業金融) 시설의 충실’에 관한 의견이 바로 정책자금에 관한 내용이다. 이를 원문을 그대로 옮기면 다음과 같다.

개발 도상에 있는 카라후토에서 그 필요성이 가장 큰 것은 소위 起業金融임에도 그 성질상 기설 금융기관의 금융 대상이 되기 어려우므로, 이에 토지개발 및 신규 기업에 대한 特殊金融機關을 창설하거나, 혹은 東拓, 拓銀[北海道拓殖銀行] 등 기설 기관의 기구를 확대하여 이러한 종류의 금융을 담당하게 하고, 이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적당한 조성을 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인정된다.<sup>41</sup>

식민지에 대한 ‘척식’ 사업에 있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자금 문제였다. 조선에 동척을 설립한 것도 소위 ‘척식자금의 공급’이 가장 중요한 목적이었

---

41 「樺太拓殖調査委員會答申及説明書 第五部ノ内(金融)」[拓務省, 「樺太拓殖調査委員會廢止ノ件」(1933b)의 부속 문서].

다. 동척은 토지수탈회사로 악명이 높지만, 소작제 농장경영 보다 더 큰 비중을 차지했던 사업은 식민지 경제 개발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공급하는 것이었다.<sup>42</sup> 그리고 ‘내국(內國) 식민지’였던 홋카이도의 척식사업에 있어 가장 중요했던 기관은 척식자금을 공급하는 홋카이도척식은행(拓銀)이었다.<sup>43</sup> 동척이 식민지 투자금융 이외에 직영사업도 병행 운영한 데 반해, 척은은 직영사업은 하지 않고 금융업만 한 금융기관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지만, 두 기관 모두 식민지 개발에 필요한 자금의 조달·운용·공급을 핵심 기능으로 했다는 점에서는 그 역할이 동일했다. 카라후토 척식 금융의 방안을 제안하는 위의 인용문에서 동척과 척은이 거론된 것은 이 때문이었다.

그런데 동척과 척은은 카라후토 척식사업에 회사 자금을 투융자하는 것에 제약이 있었다. 동척과 척은은 ‘특수회사’로서 회사의 설립과 운영을 규정된 각 ‘특수법’에 의해 설립·운영되었다. 두 기관은 국가가 특별법에 의해 설립한 특수한 회사이므로 회사의 경영은 해당 법에 규정된 바에 따라야 했다. 즉 동척은 ‘동양척식주식회사법’에 의해, 척은은 ‘홋카이도척식은행법’에 의거해야만 했던 것이다. 동척법과 척은법에는 회사의 영업 구역과 사업 목적이 명시되어 있었는데, 동척은 영업구역이 ‘조선 및 해외’로, 척은은 설립 취지가 ‘홋카이도의 척식’으로 회사법령에 규정되어 있었다. 카라후토는 ‘조선 및 해외’가 아닌 ‘외지’였고, 또 홋카이도가 아니었기 때문에 동척과 척은이

42 1920년대까지 동척의 조선 척식자금은 농업 인프라 구축 사업에 대거 투자되었다. 특히 1926년 조선총독부가 실시한 ‘산미증식갱신계획’에는 동척 자금이 조선식산은행 자금과 더불어 주요 공급원이 되었다.

43 조선에서 척은의 역할을 한 것은 1918년 설립된 조선식산은행이었다. 일본제국의 식민지 중 조선에는 동척, 조선은행, 조선식산은행이라는 3대 국책금융회사가 설립되었다는 점에서 다른 식민지들과는 뚜렷한 차이가 있었다. 대만의 경우, 대만은행은 일찍이 설립되었으나, 조선의 척은과 같은 부동산담보대출 기능은 일본흥업은행이 지점을 설치하여 수행했다.

영업을 할 수 없는 지역이었다고 하겠다. 앞의 인용문에서 “東拓, 拓銀 등 기  
설 기관의 기구를 확대”한다고 한 것은 동척법을 개정하여 영업구역에 카라  
후토를 포함시키거나, 척은법을 개정하여 척은의 설립 목적을 홋카이도에서  
카라후토까지 확장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했다.<sup>44</sup>

이 ‘기업금융 시설의 충실’에서 동척과 척은의 법률 개정보다 먼저 거론된  
것은 바로 “특수금융기관을 창설”한다는 대목이다. 설명했듯이, 동척과 척은  
의 활용에는 이미 주어진 법적 제약이 있었기 때문에 새로운 정책자금 공급  
기관을 신설하는 방안이 우선적으로 검토되어야 했다. 여기서 ‘특수금융기  
관’은 바로 특수회사로서 척식회사를 가리킨다.

국가 차원에서 척식 사업을 구상할 때에는 반드시 척식회사 설립이 함께  
추진되었다. 조선의 경우, 1931년 만주사변 직후부터 만주이민을 목적으로  
한 척식정책을 구상하기 시작했는데, 이 구상에서도 척식회사 설립이 함께  
검토되었으며, 구상이 구체화 단계에 들어갔을 때에는 선만척식주식회사(鮮  
拓) 설립 계획이 그 자체로 척식정책 계획이 될 정도로, 척식 사업에 있어 척  
식회사 설립이야말로 가장 중요한 일이었다.<sup>45</sup> 대만의 경우에도, 같은 시기  
‘열대산업조사회’를 설치하여 대만 척식 방안을 검토했는데, 이때도 대만척  
식주식회사 설립안이 함께 논의되었다. 특히 대만은 동척을 비롯해 조선은  
행과 조선식산은행 등이 포진해 있던 조선과 달리, 특수금융기관은 대만은  
행 하나뿐이었다. 게다가 대만은행은 1920년대 부실·불법 대출로 중앙정부  
차원에서 해산을 검토할 정도였기 때문에 자금공급원으로서 역할을 하지 못

---

44 동척법은 1938년 3월 개정을 통해, 동척의 사업지역을 ‘조선 및 외국’에서 ‘내지 이외의 지  
역’으로 수정하여, 동척은 일본 본토 이외 모든 지역에서 영업을 할 수 있게 되었다. 이듬  
해인 1939년 4월에는 다시 개정하여 영업구역 규정이 삭제되어 지역 제한이 철폐되었다.

45 조정우, 「조선총독부 만주이민정책의 이면: 선만척식회사 설립 경위를 중심으로」, 『사회  
와 역사』 103(2014), 207쪽.

하고 있었다. 그래서 대만에서는 이미 1920년대부터 대만척식주식회사(臺拓) 설립이 내부적으로 제기되었고, 1930년대 들어 대만총독부에서 척식 사업을 추진하자 회사 설립 움직임이 본격화되었다.<sup>46</sup> 남양군도에서도 마찬가지로 1930년대 초 남양군도개발계획이 입안됨과 동시에 남양척식주식회사(南拓) 설립이 병행 추진되었었다.<sup>47</sup> 조건은 다소 다르지만, 만주국에서도 ‘국책만주이민정책’이 대행 기관으로 만주척식주식회사(滿拓)를 설립했다.

이와 같이 일본제국의 식민지들에서는 척식 사업의 구상과 척식회사의 설립이 동시 추진되었고 또 사업 착수와 함께 척식회사가 설립·운영되었다. 그래서 카라후토척식조사위원회에서도 ‘특수금융기관’으로서 척식회사 설립을 제안했던 것이다. 하지만, 시바타 요시마사도 지적한 바인데, 척식회사 설립에 관한 척식위원회의 제안은 너무나 소략하다.<sup>48</sup> 조선과 대만에서는 척식 계획 입안에 있어 척식회사 설립 문제가 가장 중심적인 문제로, 총독부 내부는 물론이고 중앙정부 및 제국의회에서도 중대한 사안으로 논의되었다. 총독부가 마련한 회사의 목적, 법제, 주주구성, 자금조달, 임원인사 등의 계획에 대해 대장성, 척무성, 법제국, 제국의회 등에서 집중적인 검증이 진행되었던 것이다. 하지만 척식회사의 설립에 대해 카라후토청의 의지와 계획을 구체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자료는 없는 듯한데, 실제로도 ‘樺拓’은 설립되지 않았다. 조선·대만·남양군도의 척식회사들은 1936년 하반기에 모두 동시에 설립되었지만 외지 중 유일하게 카라후토에만은 설립되지 않았던 것이다.<sup>49</sup>

46 조정우, 「일본제국의 식민지 개발 구상과 척식 네트워크의 구축: 대만의 경제권역 확장 계획과 대만척식(주)의 설립」, 『인문논총』 69(2026), 40~47쪽.

47 조정우, 「제국일본의 식민지 개발 구상과 군사주의: 남양군도개발조사위원회의 남양척식회사 설립 계획」, 『아태연구』 22-3(2015), 102쪽.

48 柴田善雅, 『植民地事業持株會社論: 朝鮮·南洋群島·台灣·樺太』(東京: 日本經濟評論社, 2015), 546쪽.

49 선만척식주식회사는 9월에, 대만척식주식회사와 남양척식주식회사는 11월에 설립되었다. 만주척식주식회사는 약간 앞선 1935년 12월에 설립되었다.

‘카라후토척식회사’는 설립되지 않은 이유에 대한 기록이 없기 때문에 그 사정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기는 어렵다. 그렇다면 설립된 척식회사들과의 비교를 통해 가늠할 수밖에 없는데, 시바타도 이에 대해 카라후토청의 “정책 목표”가 명확하지 않았던 것 같다고 지적한다. 다른 척식회사들은 역내 사업과 역외 사업의 목표와 내용을 뚜렷이 했지만, 카라후토청은 기존의 농업·어업·임업·광업의 확대강화 정도만 구상했을 뿐, 척식회사라는 대형국책특수회사 설립의 필요성을 어필할 만한 척식계획을 수립하지 못했다는 것이다.<sup>50</sup> 대만척식회사의 경우, 대만 내 미개발 지역인 동부대만의 개발과 더불어 해외 사업으로서 중국의 화남 지역, 남양(동남아시아) 지역에 대한 일본 기업의 진출을 지원하여 일본제국의 경제권역을 확장한다는 목표를 뚜렷이 했다. 또 남양척식회사의 경우에도 남양군도의 자원 개발을 비롯해, 해외 사업으로 네덜란드령 뉴기니에 대한 일본의 투자를 사업 목적으로 내걸었다.<sup>51</sup> 조선의 선만척식회사도 조선 내 미개발 지역인 북선 지방에 대한 개발과, 역외 사업으로 조선인의 만주이민을 사업 목적으로 했다. 이에 반해 카라후토척식사업은 도내에 대해서도 뚜렷한 개발 대상을 명시하지 못했고, 도외에 대해서는 아무런 계획을 세우지 않았었다. 이에 대해 시바타는 카라후토의 역외라고 하면, 남쪽으로는 합병이 논의되고 있는 내지 홋카이도가 있었고, 서쪽과 북쪽은 일본에 세력을 확장할 수 없는 소련의 영토인 연해주와 사할린이었다는 점에서 척식회사의 주요 임무인 역외 투자 지원을 사업 목적에 내걸 수 없었을 것이라고 보았다.<sup>52</sup>

그럼에도 카라후토청 내부에서 척식회사의 설립을 강하게 추진했다면 설립되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척식회사가 설립된 조선·대만·남양군

50 柴田善雅, 앞의 책(2015), 547쪽.

51 위의 책, 547쪽.

52 위의 책, 560쪽.

도에서도 설립에 이르기까지 난관이 많았지만 결국 식민지 통치기구에서 관철을 시켰었다. 먼저 조선의 경우, 선만척식회사를 통한 조선인 만주농업이민 정책은 조선인의 만주 유입을 꺼린 관동군과 만주국 정부, 그리고 일본인 만주이민정책을 추진하던 농림성의 반대로 좀처럼 추진되지 못했다. 게다가 재정 지출을 우려한 대장성도 회사 설립에 동의하지 않고 있었다. 하지만 당시 일본군부의 실세 중 한 명이었던 우가키 가즈시게 조선총독의 강력한 추진력으로 결국 회사가 설립되어 조선인 만주농업이민정책은 1937년부터 시행되었다. 조선은 다분히 우가키 총독 개인의 의지와 능력에 힘입은 바가 컸었다.<sup>53</sup>

한편 대만의 경우, 앞서 설명한 것처럼, 대만은행의 부실과 투자금융기관의 미비로 1920년대 중엽부터 대만척식회사 설립의 필요성이 대두된 상황이었다. 여기에 사업의 확장을 원하는 일본계 제당기업들도 대형국책금융기관이 필요성을 주장하는 등 척식회사 설립은 대만 재계의 뒷받침도 받았다. 이러한 대만 내부의 적극성에 더해 ‘남진(南進)’을 염두에 두던 일본 해군의 지지가 결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하여 대만척식회사가 설립될 수 있었던 것이다.<sup>54</sup> 남양척식회사도 척식회사 설립을 통해 남양군도 제당업의 위기에 대처하고자 한 남양청의 뚜렷한 정책목표와 척무성의 지지, 그리고 해군의 남진 구상이 맞아떨어져 설립될 수 있었다.<sup>55</sup> 하지만 카라후토에서는 조선·대만·남양군도에서 척식회사가 성립될 수 있었던 요소들이 결합하지 못한 채 지체되었다.

이렇게 1936년 일본제국의 각 식민지들에 잇달아 4개의 척식회사가 설립되어 ‘척식 네트워크’가 성립했다. 카라후토척식회사를 설립하지 못해 그에

53 조정우, 앞의 글(2014), 214~215쪽.

54 조정우, 앞의 글(2026).

55 조정우, 앞의 글(2015).

동참하지 못했던 카라후토청에서는 그럼에도 같은 해 새로운 척식사업을 위한 예산안(1937년도)을 작성·제출했다. 카라후토청에서는 농정·탄전·유전의 개발과 어패류의 증산 등을 내용으로 한 종합적 척식을 통해 펄프제지공업에 편향되어 있던 산업구조를 개편하고, 이를 위해 자원개발의 기초가 되는 철도·도로·항만 등의 기본적 척식시설을 정비·충실히 하겠다는 계획을 수립했다. 이는 1933년의 카라후토척식조사위원회에서 제안한 척식계획만으로는 불충분함을 스스로 비판한 것이었다.<sup>56</sup>

카라후토청에서 추진한 1937년도 척식계획의 집행에 있어 중심이 되었던 것은 광업이었다. 카라후토에서 임업-펄프산업에 견줄만한 잠재력을 갖고 있던 것은 역시 광업인 데다, 중일전쟁의 발발로 에너지 수요가 증대하면서 카라후토탄에 대한 국가와 시장의 요구도 높아졌기 때문이다. 카라후토의 석탄업에는 기존 업체들 이외 동척이라는 큰 손이 참여하기 시작했다. 1938년 봄 「동척법」의 영업 구역 조항이 ‘조선 및 외국’에서 ‘내지 이외의 지역’으로 개정되면서, 동척이 카라후토에서 영업을 할 수 있게 되었다. 이에 동척에서는 카라후토의 탄전을 매수하여 석탄 채굴을 시작했다. 다른 기존 업체들도 증산을 강화하고, 카라후토청에서도 채굴 허가를 확대하면서 카라후토탄의 출탄고는 1937년 260만 톤에서 1938년 350만 톤, 1939년 490만 톤, 1940년과 41년에는 최대치인 640만 톤까지 증대했다.<sup>57</sup> 하지만 카라후토의 고질적인 문제였던 교통 인프라는 계속 담보 상태여서 석탄 출탄고는 증대했지만 내지로의 이출고는 출탄고에 비해 신장되지 못하여 1940~1941년도에 300만 톤 초반대에 머물렀다.

카라후토청이 그간 미온적이었던 척식회사 설립을 적극화한 것은 석탄을

---

56 平井廣一, 앞의 글(1997), 108쪽.

57 위의 글, 108쪽, 표5 ‘戰時期の石炭生産と樵太炭’.

중심으로 한 전시산업화의 필요성이 급부상했기 때문이었다. 카라후토청에서는 척식회사를 설립하여 그 자금으로 항만 시설을 시급히 개선함으로써 카라후토탄의 이출고를 높이는 한편, 석탄을 원료로 한 인조석유공업을 육성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카라후토청에서는 내각에 제출한 「카라후토개발회사법안이유서」에서 “시국하 중요자원인 석탄, 목재 등의 증산과 합리적 이용을 도모”하기 위해 회사 설립을 추진한다고 밝혔다.<sup>58</sup>

카라후토의 척식 사업을 수행할 척식회사가 ‘카라후토개발주식회사’라는 명칭으로 마침내 설립된 것은 다른 식민지들보다 5년여가 늦은 1941년 7월이었다. 공청자본금은 5,000만 엔, 납입자본금은 2,500만 엔으로 자본금 규모가 비교적 큰 국책회사였다.<sup>59</sup> 자본금의 50%는 카라후토청이 현금과 현물로 출자하고, 다른 50%는 동척, 오지증권, 미쓰비시광업, 미쓰이광산, 미쓰이물산, 홋카이도척식은은행, 북일본기선, 카라후토석유, 일로어업 등 주요 국책회사와 재벌 및 카라후토와 사업상 관계를 맺고 있는 회사·개인들에게 할당되었다.

카라후토개발주식회사는 설립과 운영이 「카라후토개발주식회사법」에 의거한 ‘특수회사’로 설립되었으며, 회사법령에 회사채권의 정부보증을 명시했다. 척식회사와 같은 국책특수회사들은 정책자금의 조달과 공급을 최우선의 목적으로 하는데, 자금 조달의 핵심 통로는 바로 회사채권의 기채(起債)였다. 카라후토개발주식회사(이하 ‘카라후토개발’로 약칭)의 경우, 납입자본금의 3배를 한도로 ‘카라후토개발주식회사채권’을 발행할 수 있었는데, 이는

58 樺太廳, 「樺太開發會社法案理由書」[「樺太開發株式會社法ヲ定ム」(1941)의 부속 문서].

59 설립 시 공청자본금을 비교하면, 선만척식회사가 2,000만 엔, 대만척식회사가 3,000만 엔, 남양척식회사가 2,000만 엔으로, 카라후토개발이 자본금이 훨씬 더 큰 대형국책회사로 보일 수도 있다. 하지만 이 회사들이 설립된 1936년과 카라후토개발이 설립된 1941년의 5년 동안 전시특수로 급격한 인플레이션이 발생했다는 점을 감안하면 결코 더 크다고 할 수 없었다.

국책특수회사에 주어지는 강력한 특권이었다. 일반 회사들은 민간 회사든, 국책 회사라도 특수법에 의해 설립되지 않은 회사들은 「상법」의 규정에 따라 납입자본금만큼만 회사채를 발행할 수 있었다. 특수법에 의해 특권을 부여 받은 카라후토개발은 납입자본금 2,500만 엔의 3배인 7,500만 엔의 채권을 발행할 수 있었다. 자본금을 더 납입하면 그만큼 회사채도 더 발행할 수 있었다.<sup>60</sup> 이렇게 발행된 회사채권은 회사가 투자·용자로 공급할 수 있는 자금력의 대부분을 차지했다.<sup>61</sup>

지금까지 살펴본 카라후토개발의 국책특수회사로의 주요 요소는 다른 척식회사들과 비교해 볼 때 자본금의 규모에서 다소 상이점이 있을 뿐, 법령을 비롯한 주주의 구성 방식, 임원의 임면, 상급기관의 감독 등 다른 제반 사항들은 거의 대동소이하다. 그렇다면 카라후토개발의 설립이 지체되다가 급작스럽게 성립된 이유는 무엇일까. 카라후토의 내적 동력은 별로 차이가 없었지만, 그 5년 동안 외적 조건이 바뀌었다는 점이 회사 설립에 긍정적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가장 중요한 조건 변화는 바로 1937년 중일전쟁이 발발하여 1938년부터 일본이 전시총동원체제로 돌입했다는 점이다.

---

60 당시 일본에서는 공칭-납입자본금 제도가 있었는데, 공칭자본금은 출자 자본금의 최대 한도를, 납입자본금은 실제 출자된 자본금을 말했다. 기업의 증자에 대해 법적 편의를 제공해 주는 것을 목적으로 한 것으로, 기업이 자본금을 증자할 경우 공칭자본금 한도 내에서는 주주총회의 결의가 없어도 되었다.

61 국책특수회사들이 동원할 수 있는 자금은 회사채권과 이익잉여금으로 구성되는데, 카라후토개발과 같은 척식회사들은 수익성은 없으나 국가적으로 중요한 사업을 대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일부 예외를 제외하고는 이익이 없어 이익잉여금은 자금으로 활용되지 못했다.

## V. 나오며: 척식 네트워크와 군사주의

---

1937년 중일전쟁 발발 이후 일본제국에서는 전쟁 수행을 위한 국책특수 회사들이 대거 설립되었다. ‘국책회사의 시대’라고 할만큼 다양한 형태와 목적을 가진 회사들이 잇달아 등장했던 것이다. 특히 군수물자와 연관된 산업에 대해서는 국책특수회사를 설립하여 생산을 철저히 관리하고, 필요한 유통·판매도 통제했다. 카라후토개발은 이러한 흐름 속에서 전쟁이 한창인 1941년에 설립되었던 것이다. 카라후토개발의 주력 사업은 탄광 개발이었다.<sup>62</sup> 이는 전시 에너지 자원의 확보라는 군의 요청에 호응한 바였다. 다시 말해, 카라후토개발은 일본제국의 전쟁 수행이 그 설립의 동력으로 작용했던 것이다.

1931년 카라후토청이 처음 척식계획을 수립했던 것은 카라후토 산림의 감소라는 지역적 현안에서 출발했지만, 1933년의 척식계획은 일본제국의 최대 과제였던 일만 블록 구축에서 소외되는 것에 대한 대응책이었다. 미키 마사후미도 지적한 것처럼, “만주의 급속한 산업개발에 위기감이 심해”진 것은<sup>63</sup> 카라후토만이 아니라 조선도 대만도 그러했었다. 하지만 중앙정부는 일만 블록에 최우선 순위로 두고 제국의 경제적·재정적 역량을 집중시켰다. 소외된 식민지들은 척식계획서를 들고 분주히 도쿄를 들락거렸지만 정부는 냉담했다.

1936년 하반기에 척식회사가 잇달아 설립될 수 있었던 것은 사실 그해 2월의 2.26 쿠데타로 군부가 일본 정관계를 장악하여 일본이 군국주의의 길로 돌입하면서였다. 다시 말해, 척식회사들은 다분히 군사적인 요구와 지지에 의해 설립되었던 것이다. 조선은 일본육군 조수벌의 아성으로 당시 선만

---

62 平井廣一, 「日中・太平洋戦争期における樺太行財政の展開」, 『人文學報』79(1997), 108쪽.

63 三木理史, 앞의 책(2012), 310쪽.

척식회사 설립을 추진한 것은 일본육군의 실세 우가키 가즈시게 총독이었고, 설립 당시에는 관동군 사령관을 역임한 미나미 지로가 신임 총독으로 막부임했었다. 대만과 남양군도도 일본해군의 남진 구상에 있어 전략 거점이었기 때문에 해군의 지지와 요구로 척식회사가 설립되었다. 하지만 카라후토에 대해서는 명확한 군사적 요구가 없었고, 또 카라후토를 기반으로 한 군사 세력도 뚜렷하지 않았다. 1937년 발발한 중일전쟁이 장기전으로 비화하자 에너지 문제가 전쟁 수행과 군수산업에 중요한 현안으로 부상했다. 여기서 카라후토의 풍부한 석탄이 주목을 받으면서 카라후토개발회사라는 척식회사가 마침내 설립될 수 있었던 것이었다.

## 참고문헌

### 1. 1차 자료

- 拓務省, 「樺太拓殖調査委員會設置ノ件」, 1933a(國立公文書館: Ref.A01200647200).
- 拓務省, 「樺太拓殖調査委員會廢止ノ件」, 1933b(國立公文書館: Ref.A01200647400).
- 拓務省, 「樺太開發株式會社法制定之件」, 1941(國立公文書館: Ref.A02030334300).
- 樺太拓殖調査委員會, 「樺太拓殖調査委員會答申及說明書」, 1933(國立公文書館: Ref.A01200647400).
- 樺太廳, 『樺太廳施政三十年史』, 1936.
- 「樺太開發株式會社法ヲ定ム」, 1941(國立公文書館: Ref.A02030334300).
- 樺太開發株式會社社長二神駿吉, 「樺發十年間事業計畫書」, 1942(國立公文書館: Ref.A20040037700).

### 2. 논저

- 안톤 파블로비치 체호프(저), 배대화(역), 『안톤 체호프 사할린 섬』, 서울: 동북아역사재단, 2013.
- 조정우, 「조선총독부 만주이민정책의 이면: 선만척식회사 설립 경위를 중심으로」, 『사회와 역사』 103, 2014, 193~230쪽.
- 조정우, 「제국일본의 식민지 개발 구상과 군사주의: 남양군도개발조사위원회의 남양척식회사 설립 계획」, 『아태연구』 22-3, 2015, 79~117쪽.
- 조정우, 「일본제국의 식민지 개발 구상과 척식 네트워크의 구축: 대만의 경제권역 확장 계획과 대만척식(주)의 설립」, 『인문논총』 69, 2026, 29~57쪽.
- 山口明日香, 「戰前期日本の製紙業における原料調達」, 『三田學會雜誌』 105-2, 2012, 109~137쪽.
- 三木理史, 『國境の植民地・樺太』, 東京: 塙書房, 2006.
- 三木理史, 「20世紀日本における樺太論の展開」, 『地理學評論』 81-4, 2008, 197~214쪽.
- 三木理史, 『移住型植民地樺太の形成』, 東京: 塙書房, 2012.
- 小林道彦, 『政黨内閣の崩壊と滿州事變: 1918~1932』, 京都: ミネルヴァ書房, 2010.
- 柴田善雅, 『植民地事業持株會社論: 朝鮮・南洋群島・台灣・樺太』, 東京: 日本經濟評論社, 2015.

- 塩出浩之, 「内外原思想の形成と研究—帝国日本の移民と植民」, 京都: 立命館大学 博士学位論文, 2015.
- ヤロスラブ・シュラトフ, 「ポーツマスにおけるサハリン」, 原暉之(編), 『日露戦争とサハリン島』, 札幌: 北海道大学出版会, 2011.
- 塩出浩之, 「日本領樺太の形成」, 原暉之(編), 『日露戦争とサハリン島』, 札幌: 北海道大学出版会, 2011.
- 塩出浩之, 『越境者の政治史: アジア太平洋における日本人の移民と植民』, 名古屋: 名古屋大学出版会, 2015.
- 竹野学, 「人口問題と植民地: 1920・30年代の樺太を中心に」, 『経済学研究』50-3, 2000, 117~132号.
- 中山大将, 『亞寒帯植民地樺太の移民社会形成: 周縁的ナショナル・アイデンティティと植民地イデオロギー』, 京都: 京都大学学術出版会, 2014.
- 平井廣一, 「日中・太平洋戦争期における樺太行財政の展開」, 『人文学報』79, 1997, 103~130号.

## 국문초록

이 논문은 일본제국의 군수자원동원 체제 아래 설립된 ‘카라후토개발주식회사(權太開發株式會社)’를 중심으로, 1930년대 식민지 경제개발계획의 성격을 척식(拓殖) 네트워크의 형성 과정과 관련하여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941년 ‘카라후토개발’은 전시 상황에서 전략 물자인 석탄과 목재의 안정적인 수급이 긴급한 과제로 부상하자, 이를 체계적으로 관리·증산하기 위한 국책특수회사로 설립되었다. 이 과정에서 카라후토개발은 단순한 자원수탈 기구를 넘어, 광업과 조림 및 농업경영을 통한 자급체제 구축까지 포괄하는 광범위한 척식 사업을 전개함으로써 카라후토를 제국 경제권 내의 핵심적인 자원 보급 기지로 재편하고자 했다.

특히 이 회사의 재정 운용과 사업 계획은 강력한 군사주의적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설계된 전시 통제경제의 산물이었다. 거대 자금을 투입하는 장기 개발계획은 국가 자본과 민간 척식 자본을 군사적 목적으로 결속시킨 척식 네트워크를 통해 실행되었다. 초기 경영상의 막대한 적자를 정부 보조금으로 보전하고 대규모 채권을 발행하는 특권을 부여받은 것은, 경제적 효율성보다 전쟁 수행을 위한 자원확보라는 군사주의적 긴급성을 우선시켰기 때문이다. 이처럼 국가가 투자 리스크를 전적으로 부담하며 거대 척식자본을 건인한 구조는 식민지 지배의 영속성을 피하는 동시에, 국책회사를 매개로 한 전시동원 체제가 어떻게 식민지 경제 구조와 결합하게 되었는지를 보여 준다.

투고일 2026. 1. 5.

심사일 2026. 1. 26.

게재 확정일 2026. 2. 25.

주제어(keywords) 카라후토(Karafuto), 척식회사(development company), 경제개발계획(economic development plan), 군사주의(militarism), 국책회사(state-corporation)

The Imperial Japanese Planning for Colonial Development and the Construction of the Takusyoku Network: The “Karafuto Takusyoku (拓殖) Plan” and the Establishment of Karafuto Development Company, 1931–1941

**Cho, Jungwoo**

This research analyzes the characteristics of colonial economic development in the 1930s through the formation of the takusyoku network, focusing on the Karafuto Development Company (KDC). Established in 1941 under the Imperial Japanese military mobilization system, KDC served as a state-corporation to systematically increase the production of strategic materials such as coal and timber. Beyond mere extraction, KDC aimed to reorganize Karafuto into a core resource base within the imperial economic sphere by integrating mining, afforestation, and agricultural management into a self-sufficient system.

KDC's financial operations and business plans were products of a wartime-controlled economy driven by intense militaristic demands. This long-term scheme, involving massive capital investment, was executed through a takusyoku network that consolidated state and private capital for military purposes. By granting privileges such as government subsidies to cover deficits and authorizing large-scale bond issuance, the state prioritized militaristic urgency over economic efficiency. This structure, in which the state assumed full investment risk to drive large-scale takusyoku capital, demonstrates how the wartime mobilization system—mediated through national companies—became integrated with the colonial economic structure while simultaneously seeking the long-term stabilization of colonial rule.